

육아정책 소식

어린이집 교사의 쉼(休)을 위해, 보조교사 6000명 추가 채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22일(금) 어린이집 근무시간 중 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7월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국비로 지원 중인 2만9000명의 보조교사 외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보조교사 6000명에 대한 예산(100억 원)을 전국 17개 시·도를 통해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주요 대책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한다. **첫째**,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영유아 생활지도 등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교사 6000명을 전국에 추가 배치한다. **둘째**, 보조교사 지원 대상을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또한 취약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보육교직원 복무규정에 휴게시간 부여를 명시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하여, 보조교사가 보육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넷째**, 휴게시간 사용은 원장과 보육교사 간 협의사항이나 종일 보육이 이뤄지는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활동 및 낮잠시간, 아이들 하원 이후를 주 휴게시간으로 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해당 시간대 교사 1인당 아동수를 완화하였다. **그 밖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을 기존 60세→65세로 개정하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제도시행 초기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 보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9개 지자체 선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관계부처(복지부, 행안부, 여가부)는 6월 28일(목)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지원 지역으로 서울 구로구,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 대전 서구, 경기 시흥시, 오산시,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총 9개 지역)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선정 지역에 3년간(’18~’20) 총 80억 원을 차등지원하며, 지역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모델화한 돌봄 서비스를 모범사례(Best Practices)

로 발전시켜 향후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온종일 돌봄정책 발표(18.4.4., 서울 경동초) 이후, 정부는 범정부 공동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중심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을 확정(18.4.19.)하였다. 이후, 제4차 추진단 회의(6.26.)를 개최하여 선정평가단의 서면·대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의 구체성·모델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9개를 최종 선정하였다. 정부는 선도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이번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다함께 돌봄’ 센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추진단은 수요자(아동) 중심의 질 높고 지속 가능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정 지역에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된 지자체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교육(지원)청과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초등학교의 돌봄 수요를 유형별로 촘촘하게 조사하고 돌봄 공급계획을 수립·조정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선도사업을 통해 도서관, 주민 센터 등 지역 공공 시설이나 학교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언급하였다.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확정·발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7월 5일(목)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핵심과제는 작년 12월 26일 대통령 주재 위원회 위원 간담회에서 제시한 패러다임 전환 기조를 반영하였고 특히,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다. 추진방향과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 추진방향 〉

- 패러다임 전환: 출산율 목표 →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
- 제도 활용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차별과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
- 2040 삶의 질, 양성 평등한 일·생활 균형, 모든 출생 존중 역점

■ 정책 변화 방향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① 목표	출산율·출생아 수	2040 세대 삶의 질
② 접근방식	출산장려 캠페인 → 국가주도 인식 개선	제도·구조 개혁 → 개인의 합리적 선택
③ 타겟 대상	육아기 부모 저소득 위주	청년, 아이, 여성 행복 서민, 중산층
④ 정책 주안점	보육	주거, 일·생활 균형 강화 모든 출생 존중
⑤ 실천 전략	새로운 제도	제도 활용 문턱 완화 실천에 중점

〈 주요정책 〉

- ① 특고직, 자영자 등 고용보험 未적용자 5만명,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
* (현행) 출산휴가급여 미지원 → **(개선) 90일 간 월 50만원 지원**
- ② 1세 아동 의료비 사실상 제로화
* (현행)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16.5만원 → **(개선) 5.6만원 + 국민행복카드**
- ③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확대 및 정부지원 강화
* (현행) 중위소득 120% 이하, 최대 80% 지원 → **(개선) 중위소득 150% 이하, 최대 90% 지원**
- ④ 임금삭감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日 1시간 단축 추진
* (현행) 육아휴직 포함 최대 1년 사용, 임금 80% 지원(상한 150만원) →
(개선) 육아휴직 포함 최대 2년으로 확대, 임금 100% 지원(1시간/日, 상한 200만원)
- 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상한액 인상
* (현행) 200만원 → **(개선) 250만원**
- ⑥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확대, 정부지원 신설
* (현행) 유급 3일+무급 2일, 정부지원 없음 → **(개선) 유급 10일, 중소기업 5일분 정부지원**
- ⑦ 한부모 양육비 지원액 확대, 14~18세 자녀도 지원
* (현행) 지원액 13만원(청소년 한부모 지원액 18만원), 자녀연령 14세 미만 →
(개선) 지원액 17만원(청소년 한부모 지원액 25만원), 자녀연령 18세 미만
- ⑧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제도적 차별 정비, 인식 개선, 원스톱 상담 지원
- ⑨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임차가구 주거비 경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어린이통학버스 실시간 위치알림으로 안전사고 예방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7월 18 일(수) 16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 약을 체결하였다. ‘어린이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는, 어린이통학버스 내 어린이 간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하였다. 본 사업은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희 망학교 수요조사를 거쳐 2학기부터 실시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 사업 개요 〉

- (사업대상) 유치원, 학교(초, 중, 특)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
- (사업내용) 어린이 승·하차 여부를 학부모·교사에게 실시간 문자로 전송하고, 안내된 링크를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정보 확인
 - 디지털 운행기록계에 수집된 정보를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위험운전행동(과속, 급정지, 급가속 등)을 분석
- (기대효과) 어린이통학버스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이동경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며, 승·하차 정보를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간헐 사고 예방 가능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연말까지 도입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24일(화) 최근 어린이집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국무회의(7.24)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사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세워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번 보고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아동의 안전을 관련 규정에 따라 기계적 방식으로 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방식으로 반드시 점검·확인하도록, 실시간 어린이집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하여 시행한다. 이에 따라, 우선 차량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올해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그리고, 영유아 안전 강화를 위해 미비한 법·제도를 정비한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관리책임자인 원장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보육교사에 대한 예방교육도 강화하고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 여건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사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며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보육지원체계 개편 TF」 정책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7일 오후 3시에 한국프레스센터(20층 국제회의장)에서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작년부터 구성·운영 중인 「보육지원체계 개편 TF」가 그간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정부에 제안하는 ‘개편방안(안)’에 대해 학부모, 보육교사, 전문가, 지자체 등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TF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지원체계의 문제점으로 형식적인 어린이집 12시간 운영, 현실적이지 못한 비용지원 체계, 열악한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등 3가지로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장시간 보육서비스 내실화, 비용지원체계 개선,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등 3가지 기본방향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는 일하는 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12시간 운영 규정은 계속 유지하되,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구분하는 방안이다. 12시간을 실제 어린이집 이용시간 분포 및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를 고려하여, ‘모든 아동이 공통적으로 제공받는 보육시간’인 「기본보육시간」과 ‘기본보육시간 이후의 보육시간’인 「추가보육시간」으로 구분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 대안은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운영되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가 추가보육시간에도 내실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보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 대안은 기본보육시간과 추가보육시간 각각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를 재설정하는 방안이다. 특히, 추가보육시간의 경우, 아동이 몇 명 남아있는지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보육시간이 운영되고 실제 이용시간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전담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과 이용시간을 고려한 보육료 지원(인건비 제외)을 구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 대안은 현재 근무하는 담임교사가 보육하는 기본보육시간 이후의 '추가보육시간'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TF」가 제안한 개편방안(안)과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기반으로 향후 학부모, 보육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